ISSUE BRIEF

이슈브리프 324호
(2022. 1.17)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평가와 전망

제324호

최용환 한반도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 국문초록

2021년말 개최된 북한의 조선로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분명히 대남·대외분야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한이 공개한 언론 보도에서 대남·대외 메시지는 단 몇 문장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북한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거론하며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거푸 실시하였다. 이는 2021년 내내 이중기준을 비난하던 것과 달리,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북한식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과 2022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신형무기 시험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개발 중단이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이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할지 등이 한반도 상황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권력교체기 혹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은 상대방의 진의 파악을 위한 긴장 조성을 시도해왔다는 점에서 상반기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시험도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핵심어: 극초음속미사일,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정세,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

2022년 1월 1일 북한은 신년사를 대신한 당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 보도에서 대남 및 대외관계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을 연거푸 실시하였다. 특히 두 번째 시험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여, 신형 무기체계 시험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북한은 왜 연초부터 이런 무기체계 시험을 강행한 것일까?

##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북한식 의사표현

2021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첨단무기 개발에 대해 이중기준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의 주장은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이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력 제고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중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는 분명히 대남·대외분야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한이 공개한 언론보도에서 대남·대외 메시지는 단 몇 문장에 불과했다. 그랬던 북한이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거론하며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을 연거푸 실시한 것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북한식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이른바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 개최한 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면,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능동적인 입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7월부터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에 나서는 등 상황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반대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자, 장거리순항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대공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탄 등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거듭되는 동안 남북 통신연락선은 재개와 단절, 복구를 반복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자신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고 발언하여,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지목했던 8차 당대회 당시와 달라진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무기 시험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국가방위를 위한 것이며 예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른바 강온양면책을 쓰면서 상대방의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이중기준 비난과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2021년 1월에 개최한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각종 무기체계 개발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당시 북한은 이미 완성을 선언한 전략핵무기의 고도화와 다양한 첨단전술무기의 개발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북한이 '가까운 기간 내에' 개발·도입을 공언한 무기체계는 '극초음속활공탄두',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로켓',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이다. 이처럼 북한이 실제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무기체계들은 이른바 군사강국들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북한이 볼 때 자신들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전략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첨단전술무기들을 개발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에서 북한은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제고하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북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면서 자신들의 신형 미사일 시험이 8차 당대회에서 계획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임을 강변하였다. 즉 남한이 '국방개혁 2.0' 등 중장기 계획에 의해 국방력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자신들도 자위력 제고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한 국방력 건설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장은 남한의 군사력 개발은 억제력 제고이고 북한의 군사력 증진은 도발이라는 비난이 이중기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군비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며,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공언한 '정면돌파전'이 단순 버티기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즉, 핵능력과 무기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한국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은 북한경제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북중협력을 통해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북한경제의 내구력과 북중관계가 북한 정면돌파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변수라고 할 수 있다.

## 북한경제의 내구력과 북중관계 변수

북한의 정면돌파전 선언과 거의 동시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북한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의 보건의료체계가 허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것이 북한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을 것은 거의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은 2년 간의 엄격한 봉쇄에도 버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보다 더

높은 수위의 셀프 봉쇄를 버텨냈고, 작년에는 식량증산에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물론 2021년 식량증산은 대규모 자연재해 부재의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1990년대와 같은 대규모 아사 사태가 단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제재가 지속되는 수십년 동안 북한이 보여준 것은 제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다는 점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잘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중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압력을 분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관련국들의 자제를 강조하고, 추가제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신형 무기체계 개발의 기술적 필요성, 무기 개발이 정례적이고 일상적이라는 점을 강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미묘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자, 1월 10일 미국 유엔대표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불법적인 무기 개발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CVID라는 목표를 언급하였다. 미국이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CVID 원칙을 거론함으로써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였고, 1월 12일 미국 국무부는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추가 대북제재에 나섰다. 그러자 북한은 검열사격훈련 명분으로 작년에 시험한 바 있는 철도기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고, 연이어 1월 17일에도 미사일 추가발사를 강행하였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 이른바 '강대강'으로 대응한 것이다.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첨단전술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버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북한에게 코로나19는 한편으로는 부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부의 정책실패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핑계이자 위기국면에서 체제단속 강화의 명분이라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과 과제**

북한의 입장과 2022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신형무기 시험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개발 중단이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이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할지가 한반도 상황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권력교체기 혹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은 상대방의 진의 파악을 위한 긴장조성을 시도해왔다는 점에서 상반기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시험도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사이의 딜레마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이의 검증을 위한 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의 필수 요소가 되면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군비경쟁이 발생하고, 한반도는 안보딜

레마 심화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물론 전작권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안보 능력의 확보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작권 전환 논의의 핵심이 한미 간 지휘체계 변화라면,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의 초점 역시 미래연합사령부를 지휘하게 될 한국군 장성들의 지휘능력 검증에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환능력 검증의 초점인 한국군의 능력보강 문제는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 간 군비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22년에는 한국의 대선과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결정할 20차 당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그 핵심 주변국들이 자국의 중요한 정치일정으로 인해 내부문제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협상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한국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적 레버리지와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 제고도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동결·축소 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